

제344호 (2012. 1. 16)

■ 경제 동향

- 12월 자산가치 전망, 전반적으로 부정적

■ 정책 · 경영

- CM/PM, 사업비 및 클레임 관리 역량 강화 절실
- 정비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 및 흠결 치유 방안 모색

■ 정보 마당

- 해외 건설시장, 신흥국 중심으로 성장

■ 업계 · 연구원 소식

■ 경제 일지 / 제도 · 용어 해설

■ 건설 통계

■ 건설 논단 : 혁신 없인 미래 없어

12월 자산가치 전망, 전반적으로 부정적

- 소비 심리 위축과 물가 상승 압력 심각, 주택 가격을 낮추는 근원적 접근 필요 -

■ 자산가치 전망 CSI : 부동산 보험, 금융 상품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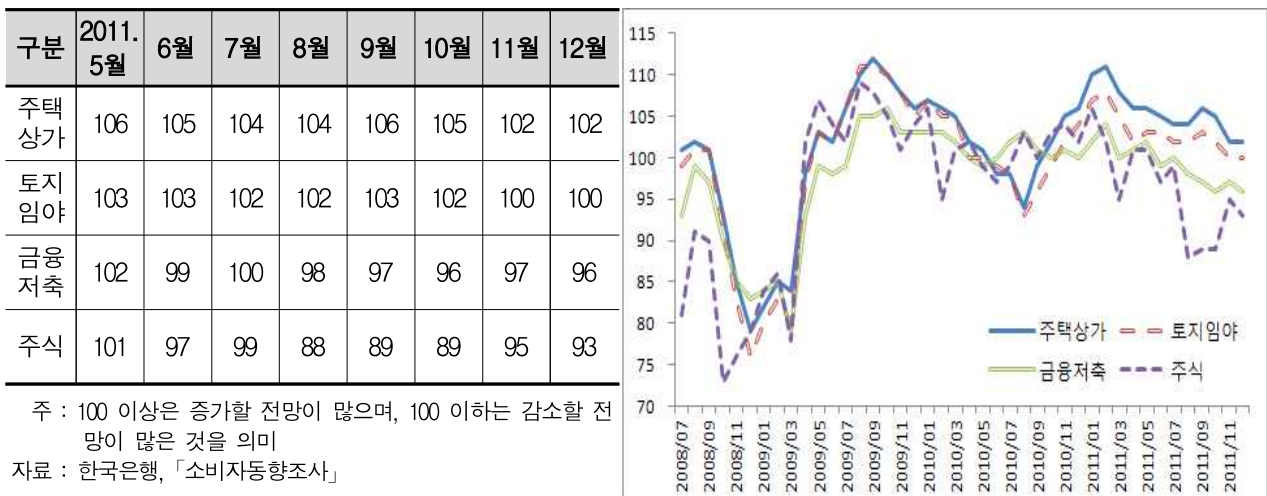
- 2011년 2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자산가치 전망 CSI가 작년 12월에는 부동산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이며 100p 내외의 보험세를 보인 반면, 금융 상품은 전월보다 하락하며 100p 이하의 수준을 보임.

- 부동산은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방안(12.7)과 지방권의 매매 가격 상승세로 인하여 보험세를 보임.
- 금융 상품은 물가에 비해 낮은 금리 수준(1년 만기 예금 금리 2.3~4.3%, 전국은행연합회, 2012.1.10)과 유럽 경제의 불안 지속으로 인하여 전월 대비 하락하며 100p 이하를 기록,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가치 전망 CSI'는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 조사」의 일부로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6개월 후의 자산가치에 대해 조사하는 지수임.

- 2011년 12월 자산 항목별 가치 전망 결과, 부동산을 제외한 지수값이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함.
- 주택·상가(102p), 토지·임야(100p)는 전월과 같은 지수 값을 보였으나, 금융·저축(96p)은 1p, 주식(93p)은 2p 하락함.

<항목별 자산가치 전망 CSI>



■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 물가 상승 가능성 높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4p 하락하며 99p 수준을 보임.
 -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지표가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특히 현재의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의 전망에 대해 큰 폭으로 하락
-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 위축과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가능성이 높아짐.
 -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급격한 심리 위축, 특히 현재의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경기도 더욱 위축시킴.
 - 최근 이란의 핵개발 등에 따른 중동의 정세 불안은 원유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여 다시 물가 상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소비자 심리지수와 구성 지수의 기여도>

		11.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 심리지수		100	104	102	102	99	99	100	103	99
(전기 대비 지수차)		2.6	3.2	△1.9	0.0	△2.8	0.0	0.8	2.7	△3.4
구성 지수의 기여도 (p)	현재 생활 형편	0.5	0.5	△0.2	△0.2	0.0	△0.5	0.5	0.2	△0.3
	생활 형편 전망	0.6	1.1	△0.5	△0.2	△0.2	0.0	0.2	0.6	△0.7
	가계 수입 전망	0.5	0.0	△0.3	0.3	△0.5	0.3	0.0	0.5	△0.8
	소비 지출 전망	0.2	0.0	△0.2	0.0	△0.7	0.4	0.0	0.2	△0.5
	현재 경기 판단	0.3	0.8	△0.3	△0.1	△0.5	△0.3	0.1	0.6	△0.5
	향후 경기 전망	0.5	0.8	△0.4	0.2	△0.9	0.1	0.0	0.6	△0.6

주 : 소비자 심리지수는 개별 지수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하여 산출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 조사」

■ 소비 심리 여전히 위축, 주택 경기 단기적으로 여전히 침체

-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의 압력이 높은 현 상황에서 고가의 내구재인 주택에 대해 구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주택 경기가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 세제, 판매 구조, 생산 절차 등에서의 근원적인 검토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엄근웅(연구원 • kyeom@cerik.re.kr)

CM/PM, 사업비 및 클레임 관리 역량 강화 절실

- CM/PM 사업의 발주자 및 사업 관리자 설문조사 결과*-

■ 설문 조사 개요

- 이번 설문조사**는 건설사업관리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관리 수행 주체의 인식 조사를 통해 주요 쟁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실시
- 최근 3년 간 수행된 CM/PM(Construction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Program Management)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관리의 단계·분야·세부 업무·성과 및 목표 평가 등에 관한 발주자와 사업 관리자의 인식을 조사하였음.

■ 발주자, 사업비 관리가 중요도는 가장 높지만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 사업관리의 단계별 중요도 및 만족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발주자는 시공 후 단계와 실시설계 단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 발주자와 사업관리자 사이에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확인됨.
- 사업 관리자는 기본설계 등의 사업 초기 단계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반면, 발주자는 후속 단계인 시공 단계의 업무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
- 사업 단계별 만족도에 대한 양 주체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단계는 시공 후, 실시설계, 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분야별 중요도 및 만족도에 대한 인식 조사의 결과, 발주자는 사업비 관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그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해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 발주자는 사업비 관리, 설계 관리, 기획 및 계획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사업 관리자의 경우 사업비 관리 업무의 중요도가 후 순위로 뒤쳐짐.
- 발주자가 평가한 분야별 업무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사업비 관리, 안전 관리, 정보 및 문서 관리, 기획 및 계획 등의 순임.

*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CM/PM의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국내 CM/PM 사업 평가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임. 전체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수록되어 있음.

** 본 설문조사는 CM/PM 유경험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수행되었음. 설문 응답은 발주자 23부, 사업관리 용역업체 52부를 포함하여 총 75부였음.

■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 업무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

- 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중 우수 업무를 묻는 설문에서는 발주자와 사업 관리자가 공통적으로 공정 관리나 품질 관리 등의 시공관리 관련 업무를 지적하였음.
 - 발주자는 공정 관리 및 부진 공정 만회 대책의 수립, 품질 관리 및 기술 지도,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VE, 건설사업관리 업무 관련 각종 보고 등을 우수 업무로 평가함.
- 취약 업무로는 양 주체 모두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 업무,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등을 지적하였음.
 - 특히, 사업 관리자 스스로가 평가한 취약 업무는 클레임 관리, 사업비 및 공사비 관리, 공정 및 공사비 통합 관리 등으로 이 부문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기 집행된 CM/PM 사업의 수행 성과는 긍정적, 향후 수행 목표는 더욱 높게

- 그동안 CM/PM의 효용성이나 수행 성과에 대한 불신과 의문에도 불구하고, CM/PM 사업을 수행한 발주자와 사업 관리자 모두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품질 개선, 안전 재해 방지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 기 수행 사업의 공사비, 공기, 품질, 안전의 4대 목표에 대한 성과 평가로, 발주자와 사업 관리자 모두 기존 사업에 비해 5%대 전후의 개선 효과를 본 것으로 응답함.
 - 향후 CM/PM 사업의 수행 목표를 묻는 질문에서는 양 주체가 기존 대비 5~20%대의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응답하여 더욱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함.

■ CM/PM 시장, 기업, 제도 및 정책 관련 쟁점의 대책 마련 필요

- CM/PM 시장, 기업, 제도 및 정책 관련 현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됨.
 - 감리와 사업관리 간의 역할 정립, 발주기관의 CM/PM 인식 부족, CM/PM 적용 사업의 사후 평가 제도 마련, CM/PM 대가 현실화, CM/PM 인력의 역량 및 자질 개선, CM/PM 발주 형태의 다양화, 사업 초기 및 시공 전(pre-construction) 서비스 업무 활용 증대, 사업 관리자의 권한 부여 미흡, CM/PM 기업의 본사 지원 체계 강화 등

김원태(연구원 · wontkim@cerik.re.kr)

정비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 및 흠결 치유 방안 모색*

- 인가 전 심사 강화로 분쟁의 사전 차단 필요, 하자 발견시엔 치유 후 후속 절차 진행이 바람직 -

■ 정비조합 설립 무효 소송과 무효 판결의 파급 효과

- 정비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로 설립
 - 조합 설립의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동의 수를 잘못 계산하는 등의 흠결 및 하자에 따른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이 2011년 8월 현재 서울시 내에서 약 82건이 제기
 - 특히, 관리 처분 인가를 마치고 이주비를 지급한 이후에 무효 판결이 내려져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발생
- 정비조합 설립 무효의 판결은 조합 설립 이후에 진행된 사업 시행 인가 및 관리 처분 인가 등 후행 사업의 단계들을 전체적·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
 - 이로 인해 사업 중단 및 장기화로 사업 비용이 증가하여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발생
 - 관리 처분 인가 이후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정비 사업 기간이 약 27개월 지연되고 세대당 약 2,300만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조합 설립 무효시 정비사업의 원천적 무효의 문제점

- 조합과 조합원, 시공사, 정비 사업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택 공급의 지연으로 인한 전월세난, 조합원 간의 갈등 치유 비용, 사업 부지의 황폐화 등 피해 발생
- 정비 사업의 전체적·원천적 무효 효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형량해보면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음.
- 조합원들이 정비 사업의 각 단계에서 동의를 표시했음에도 최초의 단계에서 일부 하자를 이유로 모든 단계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조합 제도의 본질과 관련된 법률의 취지에

*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정비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 및 흠결 치유 방안」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전체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수록되어 있음.

** 대한건설협회 내부 자료.

어긋나며 선의의 조합원 보호에도 미흡

- 정비조합의 행위는 공행정 주체의 처분임에도 조합 설립 무효 이전에 조합의 관리 처분 등을 신뢰한 상대방 및 이해 관계인의 법적 보호가 미흡하고 정상적인 정비 사업의 후행 단계들까지 소급하여 무효화해 법적 안정성을 훼손

■ 국토해양부의 유권 해석과 법원의 판결

- 국토해양부의 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 또는 흠결이 있는 경우, 조합이 자체적으로 하자 및 흠결을 치유하여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2010년 3월)은 제도 개선이 가능함을 의미
 - 법원도 ‘하자(흠) 있는 행정 행위의 치유는 행정 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10684 판결)

■ 개선 방안

- 조합 설립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제기되면 조합은 조합 설립 무효의 원인이 되는 하자 및 흠결을 자체적으로 시정·치유하여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
 - 제도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하자 및 흠결 치유 후, 조합 총회의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 변경 승인을 제도화하여 정비 사업의 지속 추진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 재확인
 - 변경 승인 또는 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그 후속 단계는 각 단계별 요건을 갖추어 재승인 또는 재인가를 받아 지속적으로 시행
- 행정법상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소 제기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다수의 조합원 의사 존중, 무분별한 소 제기 차단 등을 위해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
- 정비조합 설립 인가 기관인 지자체는 조합 설립의 인가시 제출되는 동의서 등의 서류 심사를 강화하여 인가 전에 하자를 치유하도록 적극 조치하여 조합 설립 무효 다툼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정비 사업의 분쟁을 최소화

강운산(연구위원 · wskang@cerik.re.kr)

해외 건설시장, 신흥국 중심으로 성장*

- 신흥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 향후 치열한 경쟁 예상 -

■ 2010년 해외 건설시장, 지역별로 상반된 양상

- ENR지가 조사한 세계 225대 건설기업의 2010년 해외시장 매출은 3,836.6억 달러로, 전년의 매출과 비슷한 규모를 보임.
 - 글로벌 건설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 매출은 2000년대 중반 큰 폭으로 성장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이 본격화된 최근에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조사 기업의 2010년 자국 건설시장에서의 매출은 6,68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실적은 대부분 대규모 국가 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건설기업들의 매출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 글로벌 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전체 매출에는 변화가 없으나, 지역별로는 대조적인 매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글로벌 건설기업이 유럽, 중동, 미국에서 올린 매출은 각 6.6%, 6.6%, 6.5% 감소하였으나,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권역에서의 매출은 각 25.6%, 6.7%, 4.7% 증가함.



* 본고는 「The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ENR, August 29, 2011)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본 원고상의 해외시장 매출, 해외시장 점유율 등은 해외 건설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이 아닌, 세계 225대 건설기업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것임.

■ 선진국 건설시장의 침체와 신흥국 건설시장의 성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건설시장의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건설기업들도 신흥국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많은 국가들이 정부 재정의 위기로 건축 재정의 상태에 들어섰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건설시장은 경기 회복을 위해 진행되던 건설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건설시장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였음.
 - 신흥국의 성장은 에너지 개발 및 사회 인프라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 건설시장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 줌.

■ 신흥국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건설기업의 부상

- 세계 건설시장의 변화는 건설기업의 순위에도 영향을 주어, 미국과 유럽계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 하락과 중국 건설기업의 점유율 상승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음.
 - 세계 225대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매출액을 국적별로 살펴보았을 때, 2000년대 초중반에 10% 이상의 큰 점유율을 차지하던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이었음.
 - 그러나, 2010년에는 지난 10년 간 해외시장 진출이 크게 증가한 중국의 건설기업이 해외시장 점유율 14.9%를 차지하며, 미국을 제치고 1위가 됨.
 - 중국의 건설기업들은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 속에서도 건설시장에서는 양호한 성장을 보여 온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지역을 주요 활동 무대로 하고 있음.
 - 2010년도 중국 건설기업의 아프리카권 건설시장 점유율은 38.7%, 아시아권 점유율은 22.7%에 이르며, 중동과 중남미권에서도 각각 13.8%, 9.8%의 점유율을 보임.
- 기존 선진 국가의 건설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신흥국의 건설시장에 대한 글로벌 건설기업들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음.
 - 국내 건설기업의 주요 무대도 신흥국 건설시장임을 고려할 때, 향후 더욱 치열해질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임.

성유경(연구원 • sungyk@cerik.re.kr)

■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 취업인증제' 4월부터 본격 가동

- 대한건설협회는 샘플정보기술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인증제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
- '취업인증제사업'은 건설기업이 실제 요구하는 현장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한 후 수료자를 협회가 별도 검증 기준을 거쳐 인증하면 건설사들이 인증받은 인재를 채용시 우대하는 방식으로 운영
- 협회 측은 3월까지 건설사들과 취업 인증자 우대 협약을 체결한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며, 건설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취업 인증을 받은 현장 실무형 인재를 신입사원으로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코오롱글로벌, 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기술 인증 2건 동시 취득

- 코오롱글로벌은 '고단열 투광형 박막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창호 제조 기술'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내 최초의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 한편, '공동 주택용 지열 냉난방 시스템 보급 사업'으로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역시 국내 최초의 녹색사업 인증을 획득

■ 대한건설협회, 「2011년 11월 국내 건설수주 동향」 발표

- 2011년 11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0조 5,348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 1~11월 누계 수주액은 92조 1,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 부문별로는 공공 부문이 3조 6,69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4% 증가하였고, 민간 부문은 6조 8,65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

■ 삼성물산, 카타르에서 올 첫 해외 건설공사 수주

- 삼성물산이 카타르의 루자일 부동산개발주식회사가 발주한 루자일 신도시 도로 공사를 2억 9,600만 달러에 수주함으로써 임진년 새해 첫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성공
- 이 공사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북쪽으로 22km 떨어진 루자일에 조성 중인 약 35km² 규모의 신도시에 대한 기반시설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총연장 10.7km의 신도시 내부 간선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임. 공사 기간은 총 30개월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유관기관 회의, 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 11	나이스 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신용평가전문기관인 나이스 D&B 주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건설 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참여 - 발표 주제 : 효율적인 협력 업체 관리 방안
1. 13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신년 교례회'에서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 특강 참여 - 발표 주제 : 불안과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 전략과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시장 창출 방안

■ 2012년 도서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연구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여러 종류의 간행물을 연중 발간하고 있음. 이에 연구 결과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 도서회원에게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정책 연구자료 및 각종 연구 발간물, 정기 간행물 등을 발간시마다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수시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 등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문의 : 업무지원팀(전화 : 02-3441-0712)

■ '2012년도 부서별 업무 계획 토론회' 개최

- 연구원은 1.19(목), 9층 연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부서별 업무 계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토론회는 5개 연구부서와 사업·행정 부서 5개 팀이 2012년도 부서별 연구 및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각 부서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함.

<알림>

2012년 1월 23일(월)자 건설동향브리핑은 구정 연휴 관계로 발간하지 않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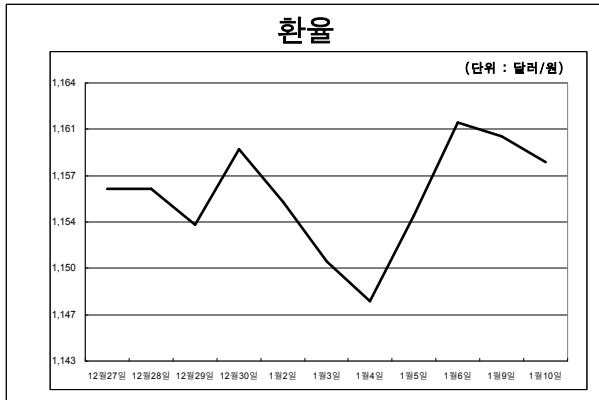
일자	주요 내용
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2011년 소재 부품 무역 실적」 공개 - 2011년 소재·부품 수출은 2,562억 달러(전년 대비 11.8%), 수입은 1,686억 달러(11.5%), 무역수지는 876억 달러(+97억 달러)를 기록하여 모두 사상 최대치 경신. 특히 무역 규모가 4,248억 달러를 돌파하여 무역 1조 달러 시대 달성의 견인차 역할
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2011년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 현황」 발표 - 국토해양부는 2011년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2010년에 비해 11.2% 증가한 2,154만 TEU를 기록하여 사상 처음으로 2천만 TEU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발표 ▪ 기획재정부, 「제109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 물가 안정에 중심을 두고 소비자 물가가 3% 초반대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서민들이 현장에서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 생활 물가 안정’에 정책 대응을 집중기로 함. ▪ 지식경제부, 「2011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 공개 - 2011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은 650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3년 이후 8년 간 지속적인 성장세. 지역별로는 중동에서는 감소(△35.3%)했으나 미주(231%)·유럽(39%) 지역의 수주가 크게 증가. 2012년에는 리비아 재건 프로젝트, 2022년 카타르월드컵 대비 인프라 프로젝트 등의 호재에 힘입어 2011년 대비 7.7% 증가한 7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제부, 2011년 IT 수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기록 - 2011년도 IT 수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569.7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 전체 수치(333억 달러 흑자)를 2.3배 상회하는 75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 시스템 반도체·스마트폰·태블릿PC 등 HW+SW 융합형 제품이 수출 견인 ▪ 외교통상부, 한·미 FTA 이행 준비 상황 점검 협의 - 그간 양측은 실무 회의, 화상 회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양국의 이행 법령 정비 상황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회의도 그 일환으로 1.9~10일 간 서울에서 한·미 FTA의 이행 준비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회의로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 「동반 성장 협약 절차 기준」 개선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생 협력 지원에 대한 배점을 대폭 낮추는 대신 납품 단가 조정이나 판매 수수료 인하 등 거래 관행의 개선에 배점을 높이는 내용으로 평가 기준을 내실화하고, 협약 체결 확산을 위해 기업의 신청제에서 협약 체결 권고제로 변경
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 「2012년 금융 감독 방향과 과제」 발표 - 2012년 금융감독원이 추진할 5대 감독 목표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감독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서비스 강화, 서민·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금융 선진화를 위한 감독 시스템 혁신, 국민·시장과 함께하는 열린 금감원상 정립 등 선정 ▪ 한국은행, 「2011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공개 - 2011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4.3% 상승했으며 연중으로는 6.1% 상승 - 부문별로는 농림수산물 및 전력·가스·수도요금이 각각 전월 대비 각각 4.4%, 2.6% 상승하였으며, 공산품 및 서비스 요금은 각각 전월 대비 0.1% 하락

<건설공사환경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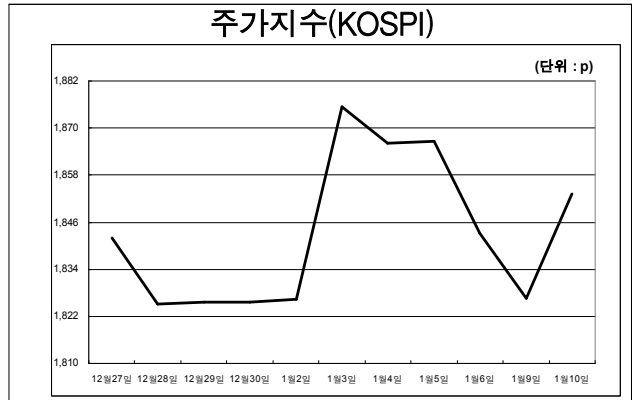
③ 폐기물 관리

- 건설 폐기물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로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 배출자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의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분리 발주시는 발주자)
- 분리 발주 대상의 규모 :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 건설 폐기물 처리 원칙 :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
- 보관 및 처리 기준
 - 건설 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하여야 함.
 - 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 처리하고, 중간 처리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중간 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혼합 금지
 - 건설 폐재류를 순환 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 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 이물질의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 이하
 - 처리 기준을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 폐기물의 위수탁 계약 체결
 - 폐기물의 종류, 위수탁량, 용역 금액, 용역 기간, 공사명, 종류별 운반 장소, 종류별 처리 장소 및 처리 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 3년 간 보관
 -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 처리업자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
 - 배출자 신고 : 건설공사 착공일까지(신고 사항 변경시 수집·운반 전까지) 제출.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기물 재위탁 금지
 - 처리업자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천재지변,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수탁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사전 승인 후 재위탁 가능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준
 - 처리 시설 바닥은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
 - 파쇄(분쇄) 시설은 투입, 파쇄, 이송, 토출 장치 및 분리 선별 장치를 설치할 것
 - 파쇄(분쇄) 시설은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를 갖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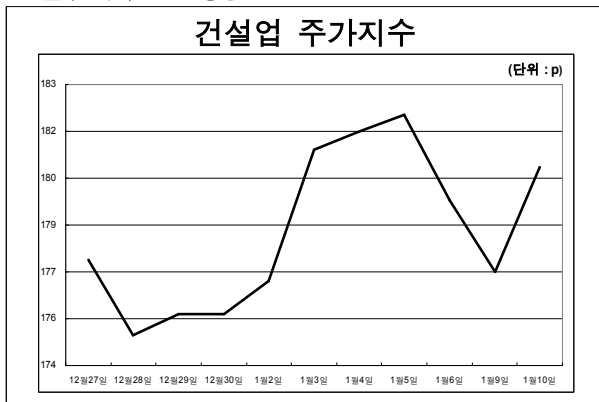
■ 주요 거시경제 지표(2011. 12. 27~2012.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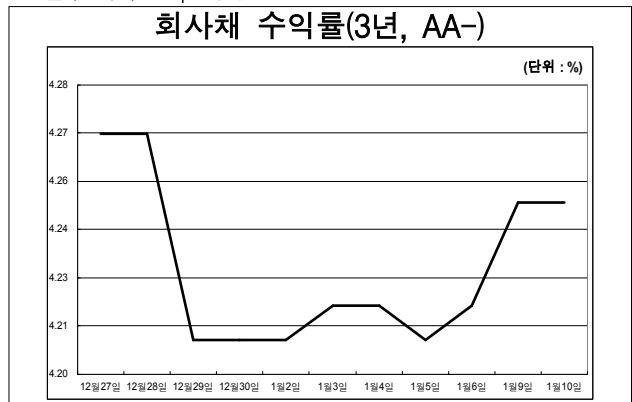
- 전주 대비 7.5원 상승



- 전주 대비 22.2p 하락



- 전주 대비 0.5p 하락



- 전주 대비 0.03%p 상승

■ 주택가격 동향

(2011. 6 = 100.0)

구 분	2011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매가격지수	97.1	98.0	98.8	99.5	100.0	100.4	100.9	101.5	101.9	102.3	102.4
서울	99.7	100.0	100.0	100.0	100.0	99.9	99.9	99.9	99.8	99.7	99.6
6개광역시	95.2	96.5	97.9	99.1	100.0	100.8	101.6	102.5	103.1	103.8	104.1
전세가격지수	95.7	97.4	98.5	99.3	100.0	100.8	101.9	103.3	104.2	104.8	104.9
서울	97.2	98.5	99.2	99.6	100.0	100.8	102.1	103.8	104.7	105.0	104.9
6개 광역시	95.2	96.7	98.1	99.2	100.0	100.7	101.6	102.6	103.4	104.3	104.5

자료 : 국민은행

■ 지가지수

(2010. 9. 1 = 100.0)

구 분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가지수	100.2	100.2	100.4	100.5	100.6	100.7	100.8	100.8	100.9	101.0	101.1
변동률(%)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자료 : 국토해양부

혁신 없인 미래 없어

건설산업이 긴 침체에 빠져 있다. 일부에서는 위기라고 한다. 2010년 실질 건설투자 규모는 2005년 가격 기준으로 157조원이었다. 외환위기 이전의 150조원과 비교하여 연평균 0.3% 증가에 불과하다. 십수년 간 제자리 걸음이다. 2010년 -1.4% 증가에서 2011년에는 -5.3%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량 감소와 제도적 문제로 건설업체들이 겪는 고충은 심각하다. 적격 공사의 평균 입찰 경쟁률은 200대 1을 넘어 수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1억원 이상의 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무려 29%에 달했다. 이런 와중에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논란이 가중되었다.

어려운 것은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상위 100대 건설업체 중에서 29개 업체가 법정관리 등을 겪고 있다. 상장 건설업체의 상반기 경영 실적을 보면, 이자 보상 비율이 100% 이하인 회사가 47%라고 한다.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세계 경제의 불안으로 수출이 줄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복지 분야 등으로 집중되면 건설투자는 더욱 위축된다는 것이다. 중장기 재정 계획에서도 SOC 투자만 유일한 마이너스이다. 노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장기적으로 저성장·저소비 사회가 고착되면 건설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또한, 건설 분야는 규제가 심하고 제도가 불안정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시장을 불신하여 만든 규제가 과도하고 경기 대응적 제도는 수시로 바뀐다. 시장 참여자들은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럴수록 비효율과 부조리가 심해지고 산업의 이미지는 나빠진다. 그러면 시장은 더욱 왜곡되고 축소된다.

건설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수십 년 쓸 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먼 미래 상황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미래가 불안하면 건설투자는 위축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면 그 대가는 훗날 지불하게 된다. 요즘 일부 정치인들은 오늘의 소비를 위해 내일을 희생하자고 유혹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 침체를 타개하려면 기업이 먼저 변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수요자들은 거품을 뺀 본질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가격은 더 싸고 품질은 더 좋아야 한다. 과거의 관행을 버리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한다. 얼마 전 한 외국 건설회사가 에너지 절약 모듈 공법 등으로 공사비 20%, 공기 50%, 에너지 소비 70%를 줄였다는 혁신적인 기사가 실렸다. 혁신이야말로 궁극적인 위기의 돌파구이자, 산업의 미래며, 소비자의 기대이다. 혁신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모호한 개념으로 계몽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준법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 안정, 그리고 규제 완화와 제도 정책의 정상화는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전제일 수 있다. <아시아경제, 12. 19>

권오현(연구위원 · ohkwon@cerik.re.kr)